

동,서독 간 통일과정과 남북한 분단 현황의 비교 및 통일의 전망에 대한 경제적 분석

- 남북통일에 대한 경제적 접근
: 독일의 선례와 남북한 경제 분석을 기초로

차 정 렬(대원외고 1학년)

I. 들어가며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이 3대 독재체제를 계승하면서 통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의견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 담긴 주제이며, 언젠가 꼭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통일을 막연한 먼 미래의 전망으로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통일의 비용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990년 동서독 통일의 선례는 남북한이 어떻게 통일에 대비해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금은 옛 동독 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통일독일이 성장세를 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엄청난 비용 적자로 큰 곤란에 빠져 있었다.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한 독일도 통일 비용을 산정하고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내었던 것이다. 남북한은 독

일의 선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미흡하게 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남북한 현 경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선례와 남북한 현 상황에 대한 경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의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무엇일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경제적 편익, 비용 분석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가시적 비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독일 선례의 경제적 분석

우선, 독일의 통일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표 1>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는 서독인들의 통일의식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볼 수 있듯이, 통일되기 전 서독인들은 통일의 가능성조차 거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표 1> 서독인의 통일의식

(단위 : %)

질문	1957년	1967년	1977년	1987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43	18	1	0.5
나는 통일의 가능성을 믿는다	60	31	8	3

● 출처 :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통일”, 1992

독일의 통일은 뜻밖에도 헝가리를 여행하던 동독인들이 서독행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가 허가되자, 수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빠져나가면서 동독 사회는 마비 상태가 되었다. 또한, 이들이 일으킨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며 참여자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다. 동독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동독 내에서 자유선거가 이루어져 결국, 서독이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통일되기 전, 공산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은 상당히 강력한 공업 국가였다. 세계 11위이면서 1인당 GDP가 \$9,703에 다다랐다. 하지만 동독이 망하고 난 후,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으로 엄청난 양을 투자해야만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간 최소 1조 2000억 유로(2160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비용으로 6,300억 유로, 사회 간접 자본 등 인프라 구축에 1,600억 유로, 농업 지원에 900억 유로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돈을 지원한 것이다. 사실 독일은 장벽 붕괴 당시 통일비용으로 약 1조 마르크(475조원)가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의 약 4.5배인 비용을 투입해야 했고 지금도 매년 1000억 유로 정도를 투입하여 겨우 경제를 상승세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오차로 인해 독일은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통일분석과 운영 과정에서 약 20여년을 심각한 통일 후유증으로 시달려야만 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 동독의 경제능력 그 잠재력을 과대평가했고, 둘째 동독 국유재산 매각이 통일비용 조달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며, 셋째, 동독경제가 급속히 붕괴되면서 통일비용의 60% 이상이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비 지출에 사용되었으며, 넷째, 동독지역의 투자유치 실패로 동독경제 침체가 만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당시 구 동독지원을 위해 ‘연대세’ (solidarity tax) 제도를 도입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통일비용이 급증하자, 독일정부는 199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7.5%를 연대세로 부과하고 사회보험료와 부가가치세도 잇따라 인상하였다. 연대세는 1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세율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통해 1995년 부활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대세로 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끊이지 않았다. 독일정부는 현재도 채권을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세율을 높이자 물가상승 뿐 아니라, 이자율도 급격히 상승하여 독일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만 가고 있다.

연대세 외에도 서독은 1990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통일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고 GDP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III. 남북한 현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

〈표 2〉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격차 비교

항목	서독/동독 (1989년)	남한/북한 (2009년)	비고
면적	3.3배	0.8배	
인구	3.8배	2배	
병력 수	3배	0.8배	
국민총소득(GNI)	43.2배	38배	독일은 GDP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2.1배	18배	독일은 GDP 기준
무역 규모	13.1배	224배	
수출	14.4배	374배	
수입	11.6배	162배	

- 출처 : 자유기업원 논문,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2011

위 표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의 남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과 동독의 인구차이는 3.8배(당시 서독은 약 6000만 명, 동독은 1700만 명)였던 반면, 남한과 북한의 인구차이는 2배 정도임(남한은 약 4900만 명, 북한은 약 2200만 명)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이나 무역 규모 등 경제적 차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1990년 서독과 동독의 일인당 구매력은 서독이 \$25,000, 동독이 \$8,500 으로 약 3:1의 비율을 보였지만 2010년 한국의 경우, 북한과 남한의 일인당 구매력이 각각 \$32,100, \$1,800으로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이다.

〈표 3〉 2011년 현재 경제 규모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GDP (Purchasing Power parity)	U\$1.574- trillion, 13위	U\$40- billion, 99위
GDP per Capita (PPP)	U\$32,100- 40위	U\$1,800- 19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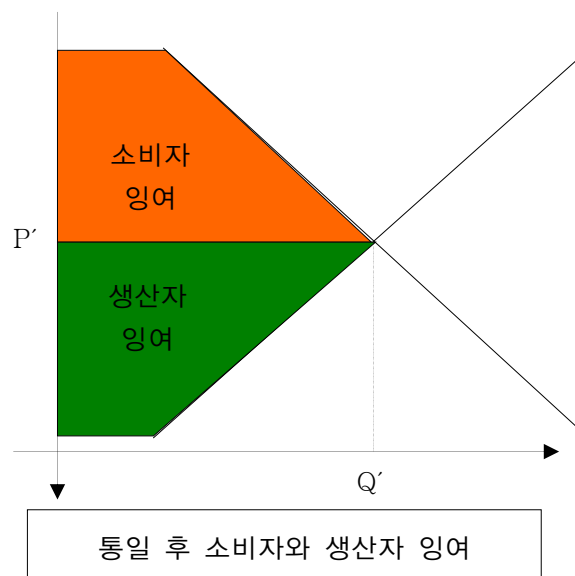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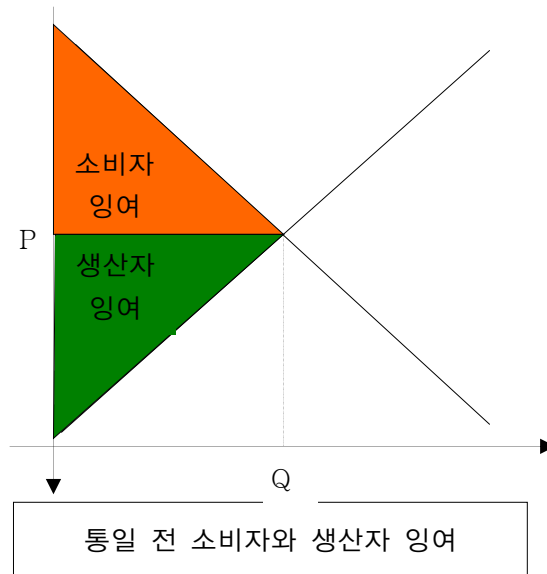
● 출처 : CIA World Factbook, 2011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통일비용이 요구된다. 통일비용의 정의에 따라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기에 그 수치는 최소 500억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이른다. 정확한 수치는 통일이 되고 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통일하기 전 어떤 요인들에 통일비용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데에 가장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독일에서도 사회복지비용에 통일비용의 절반이 소요된 것처럼 북한 내에서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계보조비, 실업수당, 복지 등의 이유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에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서로 다른 경제 체제를 통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 내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통일이 될 경우, 남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통일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편익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 잉여의 양과 Q(잠재적 GDP)의 수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이 통일하면 전체적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인데 노동력, 지하자원, 관광 자원, 분단유지비용 절감, 대북 투자에 따른 경기 활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통일 전과 후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비교



첫째, 통일 이후, 북한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제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 49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2400만 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 중 대부분은 병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인구를 모두 합치면 7000만 명이 넘게 된다. 그 중 북한 경제 활동 참가율은 70.2%으로 61%인 남한 경제 활동 참가율보다 현저히 높다. 이를 참고할 때,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이 경제 활동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북한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남한에게 통일 이후 북한의 노동력은 큰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실제, 2010년 기준으로 남한의 출산율은 평균 1.29명, 북한의 출산율은 평균 2.05명이므로 경제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미래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노동력의 증가는 국가의 잠재적 경쟁력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는 지하자원이 많다. 총 300여종의 광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단시일 내에 상업화될 수 있는 유용광물만 해도 140여종이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 잠재가치는 약 7000조원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고령토와 활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광물이 남한보다 북한에 훨씬 많이 매장되어 있다. 심지어 니켈, 인회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은 북한에만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하자원을 발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하자원은 그대로 매장되어 있거나 북한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그 지하자원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기술력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4〉 북한의 주요 광종 매장량

광종별	국가별	2010
금	남한	41.0
	북한	2,000.0
은	남한	1,582.0
	북한	5,000.0
동	남한	56.0
	북한	2,900.0

연	남한	404.0
	북한	10,600.0
아연	남한	588.0
	북한	21,100.0
철	남한	0.2
	북한	50.0
중석	남한	127.0
	북한	246.0
몰리브덴	남한	22.0
	북한	54.0
망간	남한	176.0
	북한	300.0
니켈	북한	36.0
인상흑연	남한	121.0
	북한	2,000.0
석회석	남한	99.7
	북한	1,000.0
고령토	남한	106,335.0
	북한	2,000.0
활석	남한	8,152.0
	북한	700.0
형석	남한	477.0
	북한	500.0
중정석	남한	842.0
	북한	2,100.0
인회석	북한	1.5
마그네사이트	북한	60.0
무연탄	남한	13.7
	북한	45.0
갈탄	북한	160.0

● 출처 : 통계청,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광종 매장량” , 2010

셋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관광사업을 이용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북한에는 백두산, 금강산, 천연 호수, 온천, 폭포 등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다. 다만, 아직 대외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낮은 경제력으로 관광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에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시설을 만들고 대중에게 홍보한다면 높은 관광사업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자연훼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DMZ구간에 천연동식물박물관, 자연박물관 등을 설립하여 발전시킨다면 이 또한 국제적으로 가치 높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넷째, 현재 분단 유지를 위해 들고 있는 군사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09년,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8%였으며, 약 28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는 서독의 GDP 대비 2.5%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통일 10년 후, 국방비에 전체 독일 GDP 대비 1.5% 만을 사용하는 식으로 국방비가 감축하였다. (자료 출처: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전체 GDP를 약 1000조원으로 잡는다면 통일 이후 분단유지비용을 10조원 이상 절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을 하면 대북 투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많은 토지와 자원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인력이 병력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북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적 투자유치가 성공하면서 경제적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자원 중 토지는 총 123,138km² 이고 이 중 임야 등 기타 면적의 구성비는 무려 84.5%에 달한다. 이것은 북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이나 각종 시설물들을 세움으로써 아직 개간되지 않은 토지를 활용하여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유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한계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대안

통일에 앞서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수치적인 비용만을 따지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독일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놓았었다. 하지만 동독을 과장 해석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가시적 비용으로 인해 지금도 매년 천억 유로씩 투입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시적 비용을 간과하지 않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독일에서 채용한 연대세처럼 우리나라도 통일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대세를 5.5%로 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리 통일세를 걷어 국민 모두에게 통일의식과 그 필요성을 알리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한 국민 한 사람 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낸다면 인구가 약 5,000만 명이므로 12달 동안 60억 달러, 24달 동안은 120억 달러가 생기게 된다. 가장 최소로 들 것이라 예상하는 통일비용이 500억 달러라고 한다.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말로 통일세라고 판단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고 통일이 된 이후에 격차를 줄이려 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막대하게 요구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대북에 인력 및 기술력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인 대안일 것이다.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중인 곳이 바로 개성 공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개성 공단에는 121개의 기업이 존재하며 개성공단사업으로 약 1조 5000억 원을 냈고, 현재 804명의 남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화학섬유 생산능력을 남한과 비교하면, 남한은 1,682(단위: 천M/T)이지만 북한은 177에 불과하다. 화학섬유 생산량은 남한 1,463, 북한 30으로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단순히 식료품이나 물자만 지원해주기 보다는 개성공단과 같은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고 기술적인 투자를 해준다면 통일 이후 경제협력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되기 전 서독의 상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통일의식이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서독과 동독 양쪽 모두 의식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할 때,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남한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일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사실 통일이 ‘남한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통일을 더 두려워하는 주체는 바로 남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한 내의 통일의식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남한 내에서의 의식통합이 전제로 되었을 때에만 두려움 없이 통일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일은 통일 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 경제 상태를 완벽히 회복하여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행히, 이들은 약 40년 간 분단되어 있으면서 문화적, 민족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물론, 경제적인 비용도 따져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적 이질성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진정한 한 나라로 거듭나기는 힘들 것이다. 가시적인 경제적 문제야 장기적으로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한다면 해결 가능한 시간적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더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남북한은 60년 이상의 분단을 겪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깊어만 가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언어,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 충분한 연구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교 관계에 있어서, 독일은 통일 이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전승국들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미국이 아니었다면 독일 통일의 성공 여부는 매우 미비했을 것이다. 또한 서독은 통일 전 동독의 여러 가지 자분을 유치, 투자하여 통일 비용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서독은 동독의 자분을 최대한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 선례에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지 남북한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이 우리 민족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외교 문제와 얽힌 추가 비

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의 지하 자원과 인력자원 등에 깊은 관심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상황이라면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북한의 잠재적 국가경쟁력을 탐낼 수 있다. 진정한 남북한 경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세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남북한 스스로가 통일을 대비하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IV. 맺음말

6.25전쟁과 가슴 아픈 분단을 겪은 이후로 남북한은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최근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에 국제적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우리는 통일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통일 이후의 경제적 득과 실을 분석할 때에는 가시적인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언어, 문화 등의 이질성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언어, 문화 등 이질성을 극복하는 등 비경제적인 요소 또한 고려하여 남북한의 통일국가가 최대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0년 통일을 맞이한 독일은 동독의 인프라 건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초반에는 적자를 많이 냈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유럽사회의 주축으로서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이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경제적, 물리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히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서동독이 통일국가가 되어 현재 막강한 강국으로 등극하였듯, 남북한도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막강한 통일국가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사회 내부에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의 변화도 이루어져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고대한다.

〈참고자료〉

1. 주독한국대사관,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 1991.
2. 주독한국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 통일’ , 1992.
3.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0.
4. 염돈재, ‘잘못 알려진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 자유기업원, 2011.
5. 신동천 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 삼성경제연구소, 1998.
6. 김종민,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전략과 과제, 통일재원’ , 삼성경제연구소, 2011.
7. 박근수, ‘통일비용과 관련한 통일세 신설과 관련하여’ , 삼성경제연구소, 2010.
8. 이태희, ‘다가오는 통일정국에 대비하자’ , 삼성경제연구소, 2011.
9.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소,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2010.
10.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6th Edition.
11. 통계청, 북한통계자료, <http://kosis.kr/bukhan/index.jsp>
12.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2011.
13. 양낙규 기자, ‘독일, 통일비용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 아시아경제, 2008.
14. ‘지금도 매년 1000억 유로 투입’ , <http://news.chosun.com>